

# 21세기 과학기술강국으로의 도약



李基俊  
(Lee, Ki Jun)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세계 각국은 과학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 한 나라의 운명이 첨단과학기술력 확보 여부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오늘날 과학기술은 신제품 개발 및 공정개선을 통한 경제발전은 물론이고 외교나 안보, 삶의 질 향상, 재난재해 및 환경문제의 예방과 해결, 문화, 예술, 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핵심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뛰어난 과학기술이 뒷받침되지 않는 분야는 결코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할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과학기술계 인사들의 타 분야 활동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 심지어 변호사, 의사, CEO 등을 희망하는 경우에 학사과정에서 과학 혹은 공학을 전공해야 유리하다는 인식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정부 각 부처에서도 과학기술계의 전문성을 크게 확충하여, 미국의 경우 백악관에 대통령 과학담당 특별 보좌관을 두고 있음은 물론 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국무부에도 과학기술담당 장관보좌관을 두고 있다.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입법부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과학기술을 전담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물론 거의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과학기술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입법 활동이 급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과학기술계 인사들의 국회 진출이 아주 미미한 실정이다. 17대 국회에서 전체 국회의원 중 과학기술계 출신은 7%에 불과한 21명이었으며, 이들 대부분도 학사과정만 과학기술계를 나온 행정고시 등의 출신으로서 순수하게 과학기술계 전문인사 자격으로 국회의원이 된 경우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연구개발 혹은 현장의 산 경험이 있는 과학기술계 전문인사 출신 국회의원의 숫자가 극히 적어 심지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 20명중 의대를 제외한 과학기술계 출신은 비례대표 출신의 단 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국의 과학경쟁력 세계 7위, 기술경쟁력 세계 6위, 과학기술계에 종사하고 있는 성인인구가 전체의 1/4을 차지하고 있는 여건 및 과학과 공학기술 발전추세 등을 감안할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새 정부의 행정체제개편에 따라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가 다른 부처와 통합됨에 따라 18대 국회에서는 이를 전담하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존치문제가 예상되면서 선진화 원년을 맞는 입법부의 과학과 공학기술 분야 전문성이 상당히 위축될 수 있음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전 세계 과학기술투자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강국인 미국에서는 의회의 하원 과학기술위원회(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와 상원 통상공과교통위원회(Committee on Commerce, Science, and Transportation)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관련 각종 예산 및 입법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몇 년 전에는 의사출신 과학자가 하원의장으로 뽑히기도 하였으며, 매년 행정부에서 제출되는 정부예산안 중 과학기술부문 예산은 지난 10여 년 동안 예외 없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10% 이상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각종 예산 증대 법안은 물론 나노, 바이오 그리고 우주, 심해자원 등 최첨단 미래기술의 진흥을 위한 입법안들이 끝없이 제안되고 심의된다.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인 과학기술 이슈에 대하여 초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미국 의회의 사례는 후발자이면서 가용자원이 경쟁국에 비하여 크게 열악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과학기술계 인사들의 선전을 기 대해 본다.